

[보도자료]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민 현 주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63, 이메일: newrules@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분야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일자리 확대와의 관련성, 이와 관련한 정책과 그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 국민소득 2만불 진입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고용 확대 필요

-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불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고용 확대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가격이 인하될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취업자는 전체 산업 중 근로자 비중은 약 9.7%, 이 중 여성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연령, 기혼자가 많으며 대졸이상 학력이 많은 특성을 가지지만, 세부직종을 보면, 공공행정·교육 서비스업이 고용의 질이 높은 반면 가사서비스업은 낮게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는 가격 인하에 따라 증가

-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조사와 분석은 영유아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환자 가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교육 및 상담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여성 일자리의 질적 향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 선진국 중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과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복지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가운데, 서비스 인력의 전문화, 사회적 기업 활성화, 고용관리 개선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이에 따라 연구팀은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향상,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 둘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시스템 강화, ▲소득계층에 따른 바우처 이용의 본인부담 비율 차별화, 셋째,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시행, ▲장기적인 사회서비스 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수립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